행정안전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27.(금) 별도공지			
담당 부서	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	책임자	과 장	인석근 (044-205-411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솔 (044-205-4111)
	안전정책실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	책임자	단 장	박재연 (044-205-4540)
		담당자	서기관	이일령 (044-205-4535)

정부 "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"

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포함 「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」 발표

비전	함께 만드는 「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」

분야	중점 추진과제
1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	①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② ICT 기반 '현장인파관리시스템' 구축 ③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및 신속한 상황보고·전파 ④ 모든 지자체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및 CCTV 스마트 관제 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·구급 및 의료활동
2 위험요소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	① '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신설' 및 범정부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② 네트워크 사회 새로운 위험과 기후변화에 대비
3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	① 시·도 자치경찰 이원화, 시·도지사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,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② 자치단체 역량강화 및 신종·복합 재난 주요 이슈별 합동훈련 실시
4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	① 재난데이터 통합·개방·공유를 위한 「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」 및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원스톱 서비스 「국민안전24」 신설 ② ICT 기반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재난분야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
5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	① 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② 노약자·외국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
6 민간참여와 협업 중심의 안전관리 활성화	① 생애주기별, 체험중심의 필수 안전교육(CPR) 추진 ② 국민 참여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

□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**‘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**(이하 ‘종합대책’이라 한다)’을 **1월 27일 발표**하였다.

○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**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**하는 대책을 마련하고,

○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·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**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**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.

□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**지난 11월 18일부터**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**범정부 TF를 운영**하였으며,

○ 다양한 분야의 **전문가, 국민제안,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***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.

* 국민제안 △안전신문고(11.15.~12.31., 총 1,672건) △ON 국민소통(11.23.~12.5., 총 220건), TF 전체회의(6회) 및 분과별 회의(19회) 시 전문가, 자치단체 등 참여

○ 특히,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 이전의 **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**으로 포함*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**상시적으로 관리**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,

* (현재) 예방-대비-대응-복구 ⇒ (개선) 사전예측 + 예방-대비-대응-복구 + 회복

○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**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**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다.

□ 종합대책은 ‘**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**’을 비전으로, ‘**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**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’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를 담았다.

○ 5대 추진전략은 **▲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▲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▲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▲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▲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**이며,

○ 각 추진전략에 포함된 **인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**과 **추진전략별 주요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

□ 먼저, '**인파사고**'를 재난관리 **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**하여, 사전 예방부터 대응·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관리한다.

○ 특히,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**축제·행사**도 **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** 지자체가 **안전관리계획을 수립**하도록 하여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.

□ ICT 기술을 활용한 '**현장인파관리시스템**'을 금년 내에 구축하여 유동인구 정보(기지국, 대중교통 등),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**밀집도를 모니터링**하고, 위험상황 발생시 **소방과 경찰에 전파**하고 **해당지역에는 재난문자 등**을 통해 상황을 알려서 **인파사고를 사전에 예방**한다.

○ 인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신고를 **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**하기 위해, **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***을 도입하고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를 보완하는 **112·119 영상신고를 활성화**한다.

* 일정 범위(50m) 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112시스템에 자동 표출하는 시스템

○ 이와 함께, 지자체·경찰·소방 등 기관 간 긴급신고 **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**하고, 재난 발생 시 내부 보고를 **차 상위자 직보체계로 전환**하여 상황 전파·보고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.

□ **모든 시·군·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, 24시간 상시운영***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파하는 등 초기 상황관리를 대폭 강화한다.

* (현재) 228개 시군구 중 49개 상황실 운영 → (개선) 全 시군구 상시 상황실 운영

○ 또한, 지자체 **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**하고 다양한 목적의 **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리에 활용**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자체와 경찰·소방 등 **현장기관 간 연계**를 확대하여 **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강화**한다.

○ 또한 모든 CCTV를 '27년까지 **지능형 CCTV로 전환***하고, **AI기반 이상징후 자동감지, 영상 자동분석** 등 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.

* (현재) CCTV 53만대 중 지능형 13만대(24%) → (개선) 지능형 완전 전환(~'27)

□ 아울러, **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**(DMAT)간의 **정보 공유를 강화**하고, 소방의 구급지휘팀을 운영하는 등 **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개선**하고, 지자체·소방·경찰·DMAT 등 **유관기관 합동 현장훈련**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**구조·구급 역량을 강화**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지적된 **재난안전통신망 기관 간 활용**도 **대폭 강화***한다.

* 통신망 활용 의무화 규정, 정기적 실전훈련 실시, 현장 영상 연계·공유기능 강화 등

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

□ 범정부 차원에서 **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발굴**하여 **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**하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.

○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'가칭**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**'**를 신설**하고, **지자체,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**해서 국민신고, 언론, SNS 등 다양한 매체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**위험요소를 상시 발굴**한다.

○ **새로운 대형재난**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, 장대터널 내 KTX 탈선,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등의 **위험요소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대비**해나갈 계획이다.

○ 또한,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**국가단위, 부처단위, 지역단위의 위험상황을 분석**하고, 그 결과를 **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,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**해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
○ 각 기관에서는 발굴한 위험상황에 **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**하고, 안전정책조정위원회(행안부장관), 중앙안전관리위원회(국무총리) 등의 **범정부 회의체**를 통해 **대책을 공유하고 추진상황도 점검**할 계획이다.

○ 또한 새롭게 발굴된 신종재난에 대해서는 사전예측 시스템(예: 인파관리 시스템) 개발을 통해 선제적·과학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.

□ **기후변화, 네트워크 마비**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는 집중호우, 태풍 등에 대비해 **AI 활용 홍수 예보체계** 구축, **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**, 취약주택 및 **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** 등 59개 과제*를 마련해 추진하며,

* 예보 역량 제고,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,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, 피해자 지원방안 다각화 등

○ 화재,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**중요통신시설의 망을 이원화**하고, 네트워크 오류와 통신장애에 대비해 **백업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**한다.

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

□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**지자체, 경찰, 소방이 유기적 협력체계도 마련**한다.

○ 대규모 재난 발생 시 **시·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**하고 **경찰과 소방의 합동대응을 총괄**하도록 하고, 평상시 **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·협조**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다.

○ 제주·세종·강원에서 **자치경찰 이원화 모델**을 **시범 실시**('24)하고 **다른 시·도로 확대하는 등**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자치단체의 **재난안전관리 역량**도 대폭 강화한다.

○ **자치단체장**이 **재난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**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,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(재난안전비서관) 배치를 추진한다.

○ 지역 내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운영중인 **'지역안전관리단' 운영을 확대**하고, **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**해 위험시설이 밀집한 지역부터 **'행정안전복지센터'로 단계적으로 개편**한다.

○ 아울러, 지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**재난안전 전문인력**을 **단계적으로 확충 및 재배치**하고, 중요직무급 선정 확대, 승진 가점부여 등 **처우개선도 함께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 **훈련 체계와 매뉴얼**을 **현장 중심으로 개편**한다.

○ 신종·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**현장과 협력 중심**으로 **국가 훈련체계를 개선**하고, 위험도가 높은 **주요 재난**에 대해 **시나리오를 개발**하고 **합동 훈련**을 실시한다.

※ (예시) 화재·정전 등으로 인한 고속철도 터널 내 열차 탈선사고 가정 훈련
☞ 행안부, 국토부, 공공기관, 지자체, 소방, 경찰, DMAT, 국민 등 참여

○ 또한, 주요 기능별 **공통 대응계획을 마련**하고, 매뉴얼을 **디지털(모바일)·원페이퍼**로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성을 높이고, 지역의 **위험 특성을 반영**해 실용성도 높여갈 예정이다.

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

□ 먼저,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**위험징후에 대한 사전 예측을 강화**한다.

○ 기존의 재난 예방-대비-대응-복구 단계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**과학적 재난관리**에서 더 나아가서 예방 이전에 **"사전예측"을 지원**할 수 있는 **디지털 플랫폼을 대폭 강화**한다.

□ 그리고, **정보시스템 간 연계·통합**을 통해 **디지털 플랫폼 기반**의 **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을 강화**한다.

○ 재난관리책임기관(58개)의 시스템(198개)에서 **분산 관리중인 데이터**를 '**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**'을 구축해 통합 관리하고,

○ 국민에게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**원스톱으로 제공**하는 '**국민안전24**'**도 신설**한다.

□ 선제적 **재난 예측·감지와 대응지원**을 위한 **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**도 함께 추진한다.

○ 지진·산사태 등 사전 예보가 어려운 재난의 **관측망을 확충**하고, **예측 모델을 고도화**하여 **선제적으로 예측, 감지**하고,

○ 지능형 CCTV, AI, 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**산불, 수해 등의 위험**을 **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관측·경보**하는 체계를 구축한다.

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

□ 재난 피해자들의 **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**도 강화한다.

○ 주택복구를 위한 **지원금을 상향***하고,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주요 **생계수단 업종**(소상공인)에 대한 **지원 근거도 마련**한다.

* 주택 전파 시 16백만원 → 최소 20백만원~ 최대 36백만원 지원

○ 또한,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해 **공동체의 온전한 회복**까지 고려하여 생활 인프라 정비, 소통 회복사업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**종합적 복구제도**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사상자와 유가족 소통을 강화해서 **사고수습 상황과 피해지원 제도** 등 필요한 **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**하고,

○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**의료서비스 연계**하여 **심리지원 실효성을 높이고**, 피해자·유가족 뿐만 아니라 **현장 목격자** 등으로 **심리지원 대상을 확대**한다.

□ '25년까지 **안전취약계층 대상별** 재난·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**실태조사**를 하고 조사결과에 기반한 **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**하며, **매뉴얼과 행동요령** 등에 안전취약계층의 **안전확보 방안을 포함**하도록 한다.

○ 우선 **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**하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(7만명→10만명)하고,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, 폭염·한파 시기 안부 확인 등 **노인 보호도 강화**한다.

○ 아울러, 외국인 재난피해자 **출입국 편의 지원 및 사망자 이송·인도 지원** 등의 **피해지원 기준**을 마련하고, 외국인 대상 **다국어 재난문자 발송**, 가족센터를 통한 **안전교육을 활성화**한다.

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

□ **체험 중심의 안전교육**이 이루어지도록 '**1시도 1안전체험관**' **건립, 온라인 체험관 구축 등**을 추진하고 체험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는 '**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**'**도 운영**한다.

○ 전 국민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**필수 안전교육*을 의무화**하는 방안을 마련하고, **새로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**을 강화하여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.

* 기본 이론교육 +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, 화재 대피·소화기 사용법 등

○ 또한, '안전교육 플랫폼' 내 **국민 스스로 안전실천 역량을 진단**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**자율기반 안전의식 개선도 지원**한다.

□ **국민 참여와 협업**을 통해 생활 속 **안전문화를 개선**하기 위해, 안전문화 운동추진협의회,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련 **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**하며,

○ 국민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**국민 안전신고와 안전정책 제안**을 활성화하고, 민간기업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와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하는 등 **민간 주도의 안전관리 정착**을 위해 노력한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**실제로 현장에서 작동**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**'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'을 운영**한다.

○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:행안부장관) 등을 통해 **정기적으로 점검**하고, **별도 누리집을 운영**하는 등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.

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"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"라고 말하며,

○ "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**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**하고 **현장에서 실제 작동**할 수 있는 **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**하는데 중점을 두었다"라고 밝혔다.

○ 더불어, "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「**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**」이 **현장에서 뿌리 내릴 때까지** 최선을 다하겠다"고 강조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**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변화**

「국가안전시스템 개편」 종합대책

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변화

철저한 사전 예방 대응시스템 구축으로

인파사고 등 재난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합니다

1 사전 예방

● **새로운 위험요인 체계적 발굴·관리**

- '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' 구성·운영
- 범정부 위험관리체계 구축

※ 발굴한 신종위험요소를 각종 안전관리계획에 반영

● **안전사각지대 해소**

-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

2 위험 판단

● **디지털 플랫폼 기반 위험 상황 조기파악**

- ICT 기반 '현장인파관리시스템' 도입
- 지능형 CCTV 확충 ('23년 24% → '27년 100%)

● **빠짐없는 위험신고 접수 및 대처**

- AI 기반 응급상황관리 시스템(119 신고 접수)
-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 도입
- 112·119 영상신고 활성화

3 상황공유 및 대응

● **신속한 보고 및 상황공유**

-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
- 보고 지연시 차상위자 직접보고
- 시도 단위 경찰-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 파견

● **초기대응 소통 및 협력 강화**

- CCTV, 각종 영상정보 등 기관 간 공동활용
- "긴급" 공동대응 요청 시 소방·경찰의 현장확인 의무화

● **인명보호 중심 구조구급**

- 실시간 정보공유로 최적화된 환자 이송
- 지자체-소방-경찰-DMAT 정기 합동훈련

4 후속 조치

● **실질적 피해지원**

- 피해자·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연계 심리지원
- 현장요원, 재난 목격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

● **소통강화 및 맞춤형 지원**

- 피해자·유가족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

※ 사고수습상황, 피해지원제도

-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

5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

● **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**

- 전 시군구에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

● **지역의 안전 전문성 강화**

- 자치단체장 안전교육 의무화
- 지자체 재난안전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

- 인파사고 관리 등 자치경찰 생활안전기능 강화

행정안전부

붙임 2 **5대 추진전략별 안전관리체계 변화**

「국가안전시스템 개편」 종합대책

5대 추진전략별 안전관리체계 변화

	현재 모습	변화되는 모습
전략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대비	사후대응, 복구 중심 • 재난·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 미흡 • 재난의 예측과 예방보다는 사고대응과 수습에 집중	사전 예측, 예방중심 선제적 안전관리 • 새로운 위험요소의 발굴·예측을 통한 대비 강화 * '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'를 구성, 지자체, 전문가 참여 • 범정부적인 위험분석·관리체계* 구축 * 중앙부처·지자체 협업으로 국가단위, 지역단위 위험 관리 • 기후위기, 디지털 재난 등 신종재난 대비
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	지역·현장 대응 역량의 한계 • 현장의 재난안전 권한과 역량 부족 • 지자체-경찰-소방 공동 대응이 필요한 복합재난 대응에 한계	현장대응기관의 총체적 대응역량 개선 •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* 시·도 자치경찰 이원화,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,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• 지자체-경찰-소방 공동대응력 제고 * 경찰·소방 공동대응 강화, 상황실 간 주요정보 신속공유 • 신종·복합재난 대비 합동훈련, 매뉴얼 개선* * 디지털화·원페이퍼화, 기능 공통 대응계획 마련
전략3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	개인 경험 중심 재난관리 • 신기술 적용 부족, 분산된 시스템 등 한계로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재난관리 • 과학적 재난관리의 제한적 도입 (수습·대응 중심, AI·IoT 등의 제한적 활용)	과학적 재난안전관리로 디지털 전환 • 디지털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도입 * 예방단계 이전의 사전 예측 단계를 대폭 강화 • ICT 기술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* AI, 센싱기술, IoT 활용 재난 상시 모니터링 및 예측 강화 • 재난데이터 통합관리 및 대국민* 정보 제공 * '국민안전24'를 통해 피해지원, 시설 안전정보 등 공개
전략4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	공급자 중심 지원, 사각지대 발생 • 개별 법령·제도별 지원으로 피해지원 사각지대 발생 •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	개인·공동체 맞춤형 지원, 사각지대 최소화 • 종합적인* 복구지원 및 피해지원 내실화 * 생활 인프라 정비,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추진 • 재난 심리지원 대상 확대* 및 피해자 소통 강화 * 재난 피해자 + 현장요원, 재난 목격자, 일반국민 등 •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대책 강화
전략5 민간 참여와 협업중심 안전관리	형식적 교육 훈련, 생활 속 실천 부족 • 일부 연령층(학생) 대상 교육, 형식적 훈련 • 안전불감증, 안전무시 관행 • 제한적 국민·민간기업 참여	자율적 실천 기반 안전문화 정착 • 全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 필수안전교육(CPR 등) • 국민참여 안전신고·제안 등 안전문화 확산 • 민간 주도 자율적* 안전관리, 민관협력 강화 *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및 사회공헌협약 확산

행정안전부